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월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 주말 반납 文, 구체적 경제비전 밝힐까

**내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개최
‘확실한 변화’ 관련 집중질문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11일과 12일 주말을 반납한 채 ‘경자년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 및 민생 경제·정치·사회·외교안보 등 국정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신년 기자회견 행사의 무게감이 남다른데 애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문 대통령은 주말을 반납한 채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국정운영 등 우리사회 전반적인 현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주말을 반납하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신년사를 통해 ‘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따라서 다가올 기자회견 때 구체적인 비전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그래서인지 다가올 기자회견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확

실한 변화’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 신년사 때 ‘경제’와 ‘평화’를 각각 17번씩 가장 많이 언급했다. 경제 분야의 방향으로는 공정·혁신·포용을 강조했고, 일자리·노동도 비중 있게 거론했다. 변화·성과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현 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월10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경제”를 총 35번 언급하며 가장 많이 부각시켰다. 이러한 작년 신년 기자회견은 다가올 기자회견 때도 문 대통령이 경제 현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짐작하게 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현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 8일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부동산 안정은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며 ‘향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다가올 기자회견 때 ‘부동산 정책 비전’이 언급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우승준 기자 dn1114@

민주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강행 할 듯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총선정국에 돌입하면서 패스트 트랙 정국은 사실상 이번주를 기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되고, 정 후보자의 자질·역량을 두고 여야가 설전하면서 정국경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먼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가 지난 7-8일 인사청문회 후에도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인사 관련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따라서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다. 민주당은 범여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흐트러질 것으로 예측해 소속 의원에게 본회의의 소집령을 내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의 표결을 앞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을 두고도 공방할 것으로 보인다. /석대성 기자

기성정당 심판? 反文연대 구성? 정계복귀 초읽기... 철수의 속내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바른미래 vs 자유한국 vs 새 정당
정치권, 안 전 대표 행보에 촉각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계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성 정당 심판론을 내세운 신당창당이나, 반(反) 문재인 연대 구성을 위한 중도·보수 정당으로의 전격 합류이나 등 여러 수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안 전 대표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6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뒤 독일로 떠났고,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에서 체류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당원 메시지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의 영상 편지 등을 통해 정계 복귀 물밑 작업에 나섰다. 정치권은 안 전 대표 행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야권 정치 지형도 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안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펼치며 반문연대에 합류할지, 양당 심판론을 부각하며 신당을 창당할지 등 여부다.

현재 정치권에선 안 전 대표가 반문연대에 무게를 둘 경우 기존 소속 정당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은희·이태규·김상화 등 안철수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한국 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혁신 의지를 담은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이나 새로운보수당과 발을 맞출 것이라 예측도 나온다.

다만 안 전 대표 영입을 두고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9일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에선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통추위 목적은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통추위 위원장을 맡은 박준준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안철수 합류”를 목표로 한다”며 “안철수계도 들어올 것”이라고 언급했고, 유승민 의원을 비롯

한 새보수당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 전 대표는 줄곧 ‘기성 정당의 폐해’를 강조하고, ‘양당제 극복’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당과의 접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바른미래당으로의 합류도 미지수다. 손학규 대표가 최근 ‘대표직 사퇴’를 거부하면서 노선이 불안정한 상태다.

정계 사정을 감안하면 안 전 대표는 복귀 후 신당을 만들 것이라 예측이 우세하다. 창당 후 야권 통합 연대를 구성할 것이라 의견도 나온다.

/석대성기자 bigstar@metroseoul.co.kr

탈북학생 진로역량 강화 2019 겨울방학학교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탈북학생의 학습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13일~16일까지 3박 4일간 미리내수련원(경기도 양평 소재)에서 탈북학생, 교원, 자원봉사자 등 183명이 참여하는 ‘2019학년도 탈북학생 겨울방학학교’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탈북학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탈북학생은 2761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초중고에는 587명의 탈북학생이 재학 중이다. 2018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탈북학생 5명 중 1명 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기 중에는 학교별 학습 멘토링 △격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토요일점방과후학교 △방학에는 방학학교를 운영하여 탈북학생이 학습의 끈을 놓지 않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학교는 다수의 학생과 소수의 지도 강사가 있는 일반적인 캠프 형태가 아닌 교원과 탈북학생이 1대1로 참여하는 멘토링 형태의 캠프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탈북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의 함양과 적절한 진로 설계·진학 선택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겨울방학학교가 탈북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의 꿈을 키우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총선 임박하니 민심달래기? 72건 중 61건이 ‘세금감면’

지난해 12월 국회통과 개정세법
복지예산 뒷받침 세수 줄어든 듯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 항목 72건 중 61건이 국가세금(국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과도한 복지 예산을 뒷받침할 세수 수입(세수)도 점차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점검’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조세지출 확대 및 연장 35건 ▲단순 일몰(종료시한) 연장 18건 ▲신설 8건 등 총 61건이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확대는 투자·산업·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조세지출을 확대·연장한 대표 사례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연장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문구독료 추가 공제 등이다.

신설 항목으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내국 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 세액공제, 제주도 및 위기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있다.

국회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끝날 예정이던 조세지출 항목 34건 중 절반이 넘는 18건을 연장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다.

반면 세법 개정으로 조세지출을 축소·폐지한 항목은 11건에 불과하다. 과세유형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을 축소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 지구 내 공장 지방 이전 과세 특례 1건은 폐지했다.

이같은 현상 중 하나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조세지출 항목을 더 늘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개정 항목 61건 중 17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이번 조세지출 항목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는 1852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1709억원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이다.

/석대성 기자